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89
----------	------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2월 14일

발 의 자 :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길영, 김재진, 김혜영,
남창진, 박춘선, 유정희,
이경숙, 이민옥, 이희원,
장태용, 최민규 의원(11
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전 초등학교 교내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과 안전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원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

2. 제안이유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피살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해당 교사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휴직 후 복직했음에도 복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상행동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이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해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비롯한 학교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3. 이송처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2024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오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범행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례다. 특히 해당 교사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휴직 후 복직했음에도 복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상행동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은 본인이 제출한 의사 진단서 소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진단서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이르며, 우울증 진단 건수는 5년 만에 2.3배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율과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원들이 낙인효과를 우려해 치료와 상담 자체에 대한 기피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약 7만 2천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질병휴직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돌봄교실을 비롯한 학교 안전관리체계 또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약 90%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1~2명의 인력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하교 시 동선 파악과 인계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질병 휴직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한 복직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돌봄교실을 포함한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상담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가능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넷,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되도록 학교 안전과 교원 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 2. 1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